

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자 료</h1> </div>				
 금융감독원					
 KRX 한국거래소	보도	'21.2.24.(수) 배포시	배포	'21.2.24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최 용 호(02-2100-2601)	담 당 자	김민석 사무관(02-2100-2518) 이용준 사무관(02-2100-2516)
	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박 봉 호(02-3145-5650)		임형조 팀장(02-3145-5636)
	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지 천 삼(02-3774-9002)		이재훈 부서장 (02-3774-9250)

제 목 :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－ 무차입 공매도 위반에 대한 증선위 제재 사례 －

## 1 조치 개요

- 증권선물위원회(‘증선위’)는 2.24(수)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.
-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, 이들은 2018.1월~2019.7월 기간 중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(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)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8,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. (☞ [별첨1](#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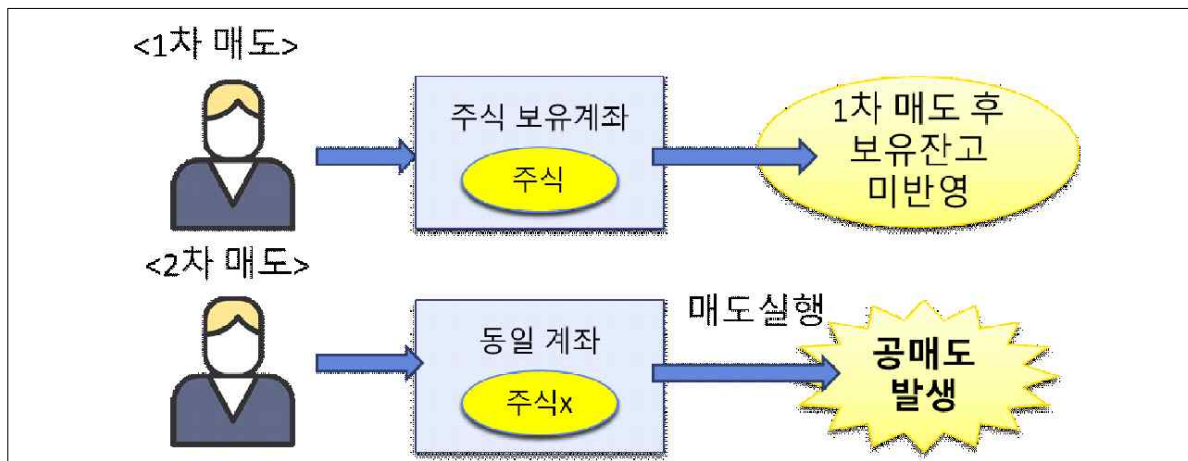


## 2 주요 위반유형 및 적발사례

### 1 1. 잔고관리 소홀에 의한 사례

- ①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하여 재차 매도주문(2차 매도)을 제출한 사례

#### <잔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>



- ②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(新株)가 상장되어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, 신주의 상장·입고일을 착오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

#### <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착오한 사례>



⇒ 이들은 공통적으로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여 주문을 제출하였고, 증선위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로서의 '중대한 위반'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.



## ② 주식 보유를 착오한 사례

-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\*(CFD)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, 자신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

\* 차액결제거래(CFD, Contract For Difference) :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,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,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의미

⇒ 금융회사는 주문 과정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‘내부통제’를 적절히 갖추고 매도 대상 주식을 해당 계좌에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‘확인’하였어야 합니다.

증선위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여 주문을 제출한 데 ‘중대한 위반’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.

## ③ 손실보전 목적의 고의적 위반사례

- 이번 조치 대상에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, ‘의도적으로’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여 결제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.

-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,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하였으나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.

\* 조치대상자는 실제 무차입 공매도 및 시간외 매수 방식의 결제를 통해 손실을 보았음

⇒ 증선위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의무를 ‘고의적으로 위반’하여 금융질서를 저해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.



### 3 향후 유의사항

- **(적발·조사강화)**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화(기존 6개월 → 1개월 주기로 주기 단축)해 나가고,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.
- ※ (참고)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법규위반에 대한 조사는 이번 조치안건과 별도이며, 3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**(대차정보 보관의무 신설)** 2021.4.6일 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(5년간)되고,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됩니다.
- **(제재강화)** 아울러, 2021.4.6일 부터는 불법 공매도(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등)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되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. (☞ **별첨2**)

#### 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00-2543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  - 인터넷 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www.cybercop.or.kr>) 접속
  - 전화 : 1332
- ☞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
  - 인터넷 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(<http://stockwatch.krx.co.kr>) 접속
  - 전화 : 1577-0088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
## 별첨1

## 불법공매도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내역

□ 증권선물위원회는 2.24일 해외 소재 금융회사(10개사)의 무차입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.

\* 총 10개 금융사의 16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 6억8,5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### <무차입 공매도 조사결과 조치 내역>

(금액단위: 백만원)

회사	위반기간(월)	위반 종목(개)	위반 금액	손익	과태료
1	2018.1월 ~2018.6월	3	15	3	97
2	2018.8월	1	1,800	290	48
3	2019.4월	1	1.25	△41(손실)	48
4	2019.5월	1	93	9	36
5	2019.5월	1	141	△4(손실)	60
6	2019.5월	1	1,266	△80(손실)	72
7	2019.5월 ~2019.9월	4	61	△2(손실)	180
8	2019.7월	1	52	—*	36
9	2019.7월	1	1,333	—	36
10	2019.7월	2	763	—	72

\* 매도(공매도)단가와 재매수단가가 동일하여 손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



## 별첨2

##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(2021.4.6일 이후)

□ 과태료(기존) → 과징금으로 변경, 제재 수준 강화 (건 기준 → 금액 기준)

□ 과징금과 별개로 형벌 규정도 신설 (병과 가능\*)

\* 단, 과징금부과 이후 형사소송에서 벌금이 확정되면,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(중복부담 방지)

[현행 : 과태료]		[개선 : 과징금] *4.6일시행
<b>❶ 위반 건 별로</b> * 주문 금액과 무관 (1백만원이든 1억원이든 1주문=1건)	⇒	<b>❶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에</b> * 주문 건수와 무관
<b>❷ 기본 과태료에</b> * 법인 6천만원, 개인 3천만원	⇒	<b>❷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</b> * 최대 100% 이내에서 「조사업무규정」별표에 세부기준 도입 예정
<b>❸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</b> * 고의여부(동기), 위반결과 등에 따라 60~100% 반영	⇒	<b>❸ 감면 반영</b> * 「조사업무규정」별표에 세부기준 도입 예정
<b>❹ 가중·감경 반영</b> * 5년 이내 전력자: 120% 다른 불공정거래와 연계: 150%	⇒	※ 형벌 규정 신설 ① 징역: 1년 이상 ② 벌금: 부당이득의 3~5배